

주관적 행복의 객관적 조건 : 정부의 행복정책과 행복학 연구에 관한 비판적 검토

서창훈(동국대)

이 글은 박근혜 정부의 “행복”과 시민사회의 “안녕” 담론이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부딪히는 현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행복 지수, 이 지수 평가의 근거가 된 행복연구의 핵심 주제들과 주관적 행복 개념을 살펴보고, 이어 행복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철학적 논의로 전환해 인간의 만물새와 행복을 느끼는 조건의 보편성에 관해 논구한다. 이 과정에서 물질적 풍요와 적절한 환경, 건강 등을 통해 내감이 판단하는 쾌감이 충족되고, 여기에 내감의 또 다른 판단 대상인 재미, 아름다움, 윤희 및 사랑의 연대감까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 안녕, 웰빙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를 준거로 정부의 “국민행복”과 시민사회의 “안녕들 하십니까”를 비교해보면 경제발전, 이익, 복지 등으로 표현된 전자는 내감의 쾌통각각을 강조한 반면 정의, 공분, 연대 등으로 표현된 후자는 내감의 시비각각에 훨씬 더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행복, 안녕, 행복학, 행복국가, 주관적 행복, 삶의 만족도, 내감, 도덕감각

1. 서론

2013년 한국에서는 행복에 관한 두 개의 담론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하나는 국가가 주도한 “국민행복”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된 시민사회의 “안녕들 하십니까”이다. 이 두 표현의 ‘행복’과 ‘안녕’은 모두 영어 웰빙(well-being)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의가 같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며 2013년 2월 출범했다. 한 해 전인 2012년 9월 새누리당은 당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내세운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구성 기획을 실행에 옮겨 동명의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5천만 국민행복 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각계 전문가와 국민대표로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행복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새누리당 2012)는 공언에 기초해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국민행복플랜위원회’와 ‘국민대타협위원회’ 2개의 산하 위원회와 ‘가계부채특별위원회’라는 1개 특위, 17개 분야 추진단, 실무를 총괄하는 1개의 실무추진단으로 꾸렸고, 별도의 자문단과 외부 연구조직도 운영하였다.¹⁾ 기존의 ‘5천만 행복본부’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 통합되었고, 분야 추진단에는 ‘행복한 일자리 추진단’, ‘행복한 여성 추진단’, ‘행복교육 추진단’ 등 모두 행복이 수식어로 따라붙었다(새누리당 2012). 열정적인 행복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4년차인 2016년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위한 정책은 담보상 태이고 일자리 역시 기대치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게다가 경제민주화,

1) 새누리당의 제18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역시 이 기초를 이어 “국민행복”을 목표로 삼고, 가계부담 덜기,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교육비 걱정 덜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확실하게 추진,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 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 국민안심프로젝트 추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지역균형발전과 대당평 인사를 10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복지, 일자리가 국민행복의 충분조건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들도 제기되었다(서문기 2015; 우성대 2014; 우창빈 2013; 이내찬 2012; 최영출 2014; 허청라 외 2014).

정부의 ‘국민행복’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은 시민들이 “안녕들 하십니까”를 묻기 시작할 때 이미 표출되었다. 이 제하에 나붙은 고려대의 한 대자보는 수천 명이 직위 해제된 철도 민영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밀양 송전탑 사건, 쌍용자동차 노조 탄압 등을 언급하며 이 상황에서 서도 시민들의 삶은 여전히 행복한지 물었다.²⁾ 국민행복을 위해 정부가 나서던 과정에, 그리고 국민행복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의 결과들이 오히려 시민행복을 억누르게 된 현실을 토로한 것이며, 이와 유사한 비판과 반성은 대자보, 집회 및 시위, 온라인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되었다. 급기야 2016년에는 정부의 “행복한 국민”과 “행복한 삶”에 반해 “흙수저”와 “헬조선”이 신조어로 자리 잡기도 했다.

‘행복국가(Well-Being State, Happy Welfare State)’나 ‘행복정치(Politics of Happiness)’에 대한 고민과 논의들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었다. 몇 개국만 사례를 들자면 부탄은 이미 1972년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ion: GNP) 대신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 지수를 도입하여 정책지표로 사용하고 있고, 2008년 2월 경제와 사회에 관한 당시의 통계정보 상태에 만족하지 못했던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Nicholas Sarkozy)는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에게 위원장직을 맡겨 ‘경제 실적 및 사회 진보 측정 위원회(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를 꾸리게 했다. 이 위원회의 목표는 경제 실적과 사회 진보의 지표로서 GDP가 갖는 한계와 측정방식의 문제를 규명하고, 사회 진보에 관한 더욱 중

²⁾ 경향신문. 2013년 12월 13일. “고대 ‘안녕들 하십니까’ 백보, 대학가 확산... 청년들이 움직인다”.

요한 지표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추가정보들을 찾는 것이었다. 대안 측정도구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하고 통계정보를 발표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위원회의 임무에 속했다(Stiglitz, Sen, Fitoussi 2010, 7). 영국에서도 민간단체인 신경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이 지구 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 HPI)를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수상 캐머런(David Cameron)의 지시로 통계청의 집행기관인 ‘국가통계처(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가 총행복지수(General Wellbeing index: GWB)를 개발하기도 했다.

우리의 헌법도 다른 근대헌법과 마찬가지로 “행복론적 헌법(eudemonistic constitution)”³⁾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헌법 전문(前文)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및 “국가는 사회복지·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를 명시하고 있다. 더구나 국가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함에 있어 국민들을 수동적인 의미에서 자유롭게 할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조건이 형성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사회국가(Sozialstaat)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2년 ‘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결정문에서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 이하)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였다”며 대한민국이 사회국가임을 표명한 뒤, 보편적인 사회국가 이념을 정리해 “사회국가

3) 이 술어는 황태연의 논문 “중도개혁주의의 정치철학과 정책방향”(2007)에서 사용되었다.

란 한마디로,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라고 정의 내렸다.⁴⁾

국민행복 추구는 부인할 수 없는 당위이며, 정부가 국민행복을 국정 지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앞서 국민의 행복 측정과 증대를 추구했던 국가들에서 정부와 국민 간의 행복 개념이 충돌했거나, 정부가 행복정책을 추진할수록 자국에 대한 각 기관들의 행복지수 평가가 낮아졌다는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는 정부 ‘행복’과 시민 ‘안녕’ 간에 격차와 갈등이 두드러진다. 이 이반 현상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가 생각하는 행복과 시민이 생각하는 행복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둘째,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은 같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셋째, 접근방법 역시 일치하지만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기술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세 번째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국민행복”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했지만 국가의 행위 또는 작위에 대해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셌고, 정책들이 발표 또는 실행될수록 반발의 강도는 오히려 높아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 역시 언어분석을 거치면 논란의 여지가 거의 사라진다. 동일한 기의(記意) ‘행복’을 떠올리면서도 정부는 경제·복지·일자리를, 시민사회는 정치적 관심·사회적 합의·민영화 반대 등을 지시대상(referent)으로 삼아온 까닭에 양자가 같은 행복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⁵⁾

4) 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관례집 14-2, 904, 910.

5) 정부의 언어적 지시대상들은 행복추진위원회의 자료에서, 시민사회의 지시대상들은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간의 감정과 인식 능력에 기초하여 첫 번째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다. 특히 논증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될 두 가지 가닥이 있는 바, 하나는 행복학 연구의 다양한 결과들 중에서 공리주의적 요소들만을 집중적으로 차용한 한국 정부의 행복정책, 다른 하나는 ‘주관적’ 행복을 강조하면서 행복의 보편적 객관적 성격을 지나치게 상대화한 행복학 자체의 문제이다. 가능성 검증을 위해 2장에서는 우선 한국의 행복에 대해 평가한 다양한 기관들의 실증자료들을 취합해 살펴보고, 이어 이 수치들의 산출 근거가 된 행복연구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행복에 대한 인식변화도 확인될 것이다. 3장에서는 황태연의 감정이론을 토대로 행복의 인지메커니즘과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본성에 대해 궁구한다.

2. 행복지수와 행복학

1) 한국의 행복 지수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삶을 위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대신 ‘합의되지 않은’ 행복을 유일한 가치로 삼아 변경 불가능한 “행복정책”들을 시행한 결과는 오히려 국민들의 행복감을 앗아가는 수치들로 돌아왔다. 행복과 삶의 질을 조사하는 대표적인 기관들의 분석결과는 한국인들의 주관적인 행복감을 객관적인 수치로 계량화해 보여주고 나아가 한국 사회의 특징도 여실히 드러내 보인다.

UN 발표의 행복도 순위는 156개국 중 2013년 56위, 2014년 41위를

2013년 2월 10일 고려대학교에 최초로 붙은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에서 각각 부각된 것들이다.

기록했고, 글로벌 여론조사기관인 갤럽(Gallup)은 2013년 ‘국가 행복 순위(Country Well-Being Rankings)’ 발표에서 한국의 순위를 75위로 평가하면서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출로 인해 향후 한국의 행복지수가 개선될 것이라고 예견했다(Gallup-Healthways 2014, 61). 그러나 이듬해 한국의 순위는 117위로 급락했다(Gallup-Healthways 2015).

OECD가 발표한 한국의 행복 수준은 회원국에 러시아와 브라질이 포함된 36개 비교국가들 중 2013년 27위, 2014년 25위, 2015년 27위로 나타났다.⁶⁾ 이 조사에서 한국인들의 행복(well-being)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파악된 삶의 만족도는 개인들이 자신의 건강, 교육, 수입, 개인적 만족감과 사회적 여건 등에 대해 갖는 매우 주관적인 느낌의 측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삶의 질을 측정할 때 객관 자료들을 보완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삶의 만족도는 현재 느낌 보다는 삶 전체에 대한 평가를 묻는 것으로 0에서 10까지의 척도가 제시되었다. 한국은 3.8점을 받아 조사대상국 중 29위에 자리했다.⁷⁾ 그 밖에 시민참여, 교육, 개인, 직업은 OECD 평균을 상회했고 수입, 환경, 건강, 사회적 연계, 일과 생활의 균형 등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체와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평가는 심각했다. 한국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들이 있는지 물어본 ‘지원 네트워크의 질’ 조사에서 7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사회적 동물

⁶⁾ OECD는 행복지수(OECD Life Satisfaction Index)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자들이 11개 주제의 중요도를 자신의 개별 선호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 놓았다. 2015년 7월 11일 현재 한국의 방문자 633명이 여기에 응답하였으며, 자동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들은 자신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삶의 만족도, 안전, 건강, 교육, 일과 생활의 균형, 수입, 직업, 주거, 환경, 공동체, 시민참여 순으로 나열했다.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responses/#KOR>(검색일: 2015. 7. 1)

⁷⁾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life-satisfaction/> 한편 모든 항목을 고려한 한국의 전체 행복지수는 27위로 나타났다. (검색일: 2015. 7. 1)

인 인간의 행복에 있어 타인과의 접촉 빈도와 개인적인 관계의 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도 ‘공동체’ 항목 평가에서는 전체 조사대상국들 중 유일하게 0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⁸⁾

이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한국의 특징은 각 지표들마다 두드러진 남녀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이다. ‘직업’의 ‘개인소득’ 항목에서 남녀 불평등은 36개국 중 36위를, 사회적 불평등은 33위를 차지했다. ‘공동체’의 남녀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은 29/36위와 21/21위를, ‘교육 기간’의 남녀 불평등은 34/36위를, ‘시민참여’의 남녀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은 25/36위와 32/36위를 기록했으며, ‘삶의 만족도’의 남녀 불평등은 36/36위, 사회적 불평등은 25/29위,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 여가와 개인활동에 할애한 시간의 남녀 불평등은 34/36위를 각각 기록했다.⁹⁾

국가가 “국민행복”을 표방한다면 행복을 직접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에 필요한 여건들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맥락에서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제조건이며(Sen 2000), 다시금 행복의 전제조건이다. 또한 최근 행복학 연구들도 정부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정부의 기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시민들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Bok 2010, 179).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 자유의 대표적인 척도인 언론의 자유와 제도적 정책결정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세계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2013년 발표한 언론자유도 조사에서 한

⁸⁾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community/> (검색일: 2015. 7. 1)

⁹⁾ 이 중 ‘삶의 만족도’만 여성이 높았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여성과 저소득층이 차별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검색일: 2015. 7. 1)

국은 OECD 34개국 회원 중 30위로 집계되었으며, 그 결과 ‘부분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분류됐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도를 2013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60위로 평가했다. 한국은 2014년 기준 ‘눈에 떨 만한 문제가 있는 나라’다(김여라 2015). 국가경쟁력을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제도 및 제반 요소”로 정의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도 2014년 자료에서 한국의 제도적 정책결정 투명성을 144개 대상국 중 133위로 평가했다.¹⁰⁾

국제단체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국내의 조사결과들을 보건데 단기간 내에 한국인들의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은 난망해 보인다.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2009년에 비해 하루 일과 중 일·학습·여가활동 등에 할애하는 시간은 줄고 수면·식사 등 필수생활을 위해 보내는 시간은 늘어나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들로부터 더 멀어졌다. 특히 여가생활 중 TV시청 등 미디어 이용 시간은 1분, 종교·문화·스포츠에 할애한 시간은 2분이 증가한 반면 교제에 사용된 시간과 취미활동·유희·게임 등 기타 여가활동에 사용된 시간은 각각 4분씩 줄어서 행복도 측정과 관련해 비중이 커지고 있는 사회성의 확보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참여 및 봉사활동은 전체 비율이 너무 낮아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기도 했다(통계청 2015). 게다가 2014년 세월호 사건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는 전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 및 정부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급기야 대통령의 지지도를 30% 아래로 끌어내렸다(한국갤럽 2015).

10) 한국의 제도적 정책결정 투명성은 노무현 정부 기간의 평가가 반영된 2008년 44위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9년 100위로 급락했으며, 이후 2010년 111위, 2011년 128위, 2012년 133위, 2013년 137위를 기록했다(WEF 2014; 조현정 2015).

이런 결과들이 반영돼 상당수의 국민들은 한국을 떠나고 싶어 했다. “대한민국에 다시 태어나고 싶은지” 묻은 2015년 한 설문조사에서는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다’(30.2%)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57.7%의 응답자가 ‘요즘 같아선 다시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삶의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76.7% 중복),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62.9%),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어서’(61.7%) 등을 들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민을 고려”해본 적이 있거나(7.4%) “그저 막연하게 한번쯤 생각”해봤다(69.0%)고 답했다(마크로밀엠브레인 2015).

2) 행복학의 행복 결정요인과 주관적 행복

‘행복’ 또는 ‘삶의 질’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들은 대부분 행복학(Happiness Research)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내려졌다. 이 연구는 ‘객관적 행복(objective well-being: OWB)’의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 SWB)’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규명하기 위해 시작되었다.¹¹⁾ 연구 초기에는 고전적인 철학, 정치학, 교육학, 행정학에 사회생물학, 신경과학, 긍정심리학, 행동경제학 등 다양한 현대과학들이 결합해 “좋은 삶 또는 행복한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바람직하게, 쾌적하게, 좋게 만드는가”를 물었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는 좋은 삶의 본질에 관한 질문에서 경험적 과학방법들로 관심을 전환했다. “주관적 행복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이것이 실제로 만사에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따지

11) 아직까지도 과학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The Science of Happiness’보다는 ‘Happiness Study’ 또는 ‘Happiness Reserch’로 표현되고 있다.

려는 노력은 줄어들었고, 이 여부를 묻는 것은 통상 과학을 넘는 철학적 문제로 간주되었다. 대신 학자들은 주관적 행복이 최고선(最高善)인지와는 상관없이 좋은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행복의 조건과 결과들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다. 그래서 행복이 ‘summum bonum’인지, 최고선인지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무엇이 이 상태를 야기하며 이것이 바람직스러워 보이는 결과들을 산출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었다.”(Diener 2009b, 1)

‘행복’에 대한 학문적 일상적 관심은 급증했지만 철학적 물음을 멈춘 까닭에 용어 사용에 다소 논란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선이 ‘행복(eudaimonia)’이고, ‘행복하다는 것’은 ‘잘 사는 것(eu zen)’이요 ‘잘 행위하는 것(eu prattein)’이라고 명쾌하게 정의 내렸지만(Aristotle 2009; 김성동 2007, 53), ‘웰빙’에는 쾌락이 개입하기도 하고 다른 다양한 용어들과 혼용되기도 한다. 개념적 혼탁을 막기 위해, ‘OECD의 웰빙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이 웰빙을 구성하는 11개 차원 중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을 행복(happiness)이라 지칭한다는 것을 근거로 행복을 웰빙과 동의어가 아니라 웰빙보다 외연이 더 좁은 부분집합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우성대 2014, 304). ‘주관적 웰빙’이 행복을 실증과학화하기 위해 채용된 용어이므로 이 설명은 틀리지 않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행복(happiness), 주관적 행복 또는 안녕(subjective well-being), 그리고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가 동일한 의미로 교차 사용되고 있어서, 실증과학도 수용할 수 있는 행복의 현대적인 개념 재정립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행복이 실증과학과 결합하여 본격적인 연구 대상이 된 것은 미국 경제학자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이 ‘행복의 역설(Easterlin Paradox)’을 발견해 논문으로 발표한 직후이다. 그는 2차대전 이후의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의 소득수준과 행복 수준의 증가를 비교해 본 1974년

연구에서 소득이 두세 배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찾아냈다(Easterlin 1974).

행복학자들은 행복의 역설이 나타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첻바퀴효과(treadmill effect)’이다. 첻바퀴효과는 다시 적응(adaptation)때문에 생기는 기대수준과 성취 간의 차이를 표현하는 ‘쾌락의 첻바퀴효과 (hedonic treadmill effect)’와 타인과의 상대적 비교에서 나타나는 ‘지위의 첻바퀴효과(positional treadmill effect)’로 나뉜다(우창빈 2013, 287). 다른 하나는 행동경제학에서 발견한 판단 휴리스틱(heuristics)으로,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 선호의 역전(preference reversals), 손실 회피(loss aversion) 등으로 인해 효용 극대화에 이르지 못한다는 견해다(Kahneman, Wakker, Sarin 1997; Kahneman 2011).¹²⁾

대부분의 학자들은 행복 결정요인으로 개인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다. 대개 심리학분야에서는 전자를 강조하는 데 비해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에서는 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철학과 교육학 분야에서는 균형을 맞추고 있는 추세다. 환경과 맥락(context)의 요인들로는 나이·성별·교육수준·건강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 실업률·인플레이션률·성장률과 같은 경제적 조건,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등 제도적 조건, 테러리즘·내전·부패 등의 공공재, 쾌적성 등의 환경적인 요인 등이 제시된다(우창빈 2013, 286). 영국의 노동경제학자이자 행복경제학(happiness economics)의 대가인 레이어드(Richard Layard)는 나이, 성별, 외모, 지능지수와 스스로 평가한 신체적 정신적

12) ‘효용’의 의미는 결정 결과에 무게를 두는 ‘결정효용(decision utility)’과 벤담(Jeremy Bentham)의 용례로 쾌락의 질을 따지는 ‘경험효용(experienced utility)’으로 대별된다. 이 경험효용은 다시 실시간적인 평가나 과거 사건에 대한 회고적 평가로 나뉜다. 카너먼(Daniel Kahneman)은 회고적 평가의 시스템 오류를 밝힌 심리학 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간적으로 확장된 산출결과의 모든 경험효용에서 오류가 나타남을 규명한다(Kahneman, Wakker, Sarin 1997).

에너지, 교육수준 등은 개인의 행복에 별 상관이 없다고 밝히고, 대신 행복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7대 요소(Big Seven)를 가족관계, 재정, 일, 공동체와 친구, 건강,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가치관 순으로 나열했다(Layard 2005, 62 - 65). ‘안정된 삶’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OECD 국가의 행복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한 연구도 있다(이내찬 2012, 33 - 34).¹³⁾

국내에서는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인의 행복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를 심리적 안정(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가족결혼(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개인적 관계(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역사회(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일상생활(만족스러운 수면,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경제적 안정(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일(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건강(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가족의 건강수준, 규칙적인 운동여부), 주거(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9개 영역으로 나누어 선정했다. 이 중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등의 순으로 전체 행복지수에 큰 영향을 미

13) ‘안정된 삶’에는 삶을 윤택하게 유지하기 위한 주거 환경, 건강,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소득과 고용률, 사회자본, 인생만족도가, ‘소득분배의 공평성’에는 지니계수, 빈곤가구비율, 성차별, 치안이 포함되었다.

쳤으며,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는 영향력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장영식·조흥식·차명숙 2008, 238 - 244, 301 - 304).

3) 행복관의 변화

행복을 얻으려는 서구의 관심을 계몽주의 이후 출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파악하는 연구도 있지만(Abbinnett 2013), 행복에 관한 논의의 역사는 대개 행복이 자기목적적인가 도구적인가 또는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의 여부로 갈려왔다(Kesebir and Diener 2009; McMahon 2006; 서은국 2014).¹⁴⁾ 그리고 기나긴 행복의 사상사는 몇 가지 주제어로 간략히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덕, 로마시대의 번영과 신들의 총애, 중세 기독교의 천국. 전 역사에 걸쳐 행복은 인간 최고의 소명이요, 인간의 가장 완전한 상태로 이해되었다. 허공에 떠 있는, 보이지 않고 느낄 수도 없는, 혹은 내세에 있던 행복은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땅에 발붙이게 되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심지어 혈관을 타고 돌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쾌락이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위시한 고대 사상가들은 “행복은 좋은 활동이지 여흥이 아니”라며 삶이 행복의 객관적인 기준들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파했고(Aristotle 2009, 192),¹⁵⁾ 17세기 후반 등장한 쾌락주의 사상가

14) 헤이브론(Daniel Haybron)은 역사적 철학적 맥락에서 행복(well-being)에 관한 연구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행복을 쾌락과 동일시하는 쾌락주의(hedonism); 행복을 개인적 욕망의 실제 충족과 동일시하는 욕구이론; 자기 삶의 여건에 정초한, 그리고 조작이나 억압적인 사회 여건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진짜 가치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자율적인 참된 행복 이론(Authentic Happiness Theories);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완벽이나 덕을 강조하는 에우다이모니아적(또는 본성충족) 이론; 지식, 우정, 성취, 쾌락 등의 좋은 것들을 그대로 나열하는 목록 이론 등이다(Haybron 2008, 22 - 27).

15) 동양에서는 학습의 내면적 기쁨, 사회와 공유하는 외연적 즐거움, 그리고 자기완성에서 행복을 찾았고, 군자의 인정(仁政)을 최상의 행복조건으로 내세웠다(안외순 2010, 328).

들은 행복을 단순히 삶에 만족스러운 주관적인 상태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쾌락이 최고선으로 받아들여지자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가장 좋은 쾌락의 수단에 대해 논하기 시작했고, 벤담(Bentham)과 밀(J. S. Mill) 등의 근대 공리주의자들은 행복을 공공정책의 제1지표로 제시했다. “공공정책에 활용할 정도로 신뢰성 있는 행복의 ‘측정 방식(way of measuring)’을 고안해내지 못해” 좌절되었던 이 기획은 통계와 최첨단 과학기술에 힘입어 20세기 후반부터 생기를 띤 행복연구를 통해 부활했다(우성대 2014, 309).

현대 행복연구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윌슨(Warner Wilson)은 돈을 잘 벌고, 젊고, 교육 받고, 신앙이 있으며 결혼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믿었다.¹⁶⁾ 그러나 주관적 행복에 관한 연구는 “행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질로 축복을 받았고, 나쁜 사건들에 관해 과도하게 반추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발전된 사회에서 살고 있고, 사회적인 막역지우가 있고, 가치 있는 목표들을 향해 전진하는 데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Diener and Lucas 1999, 295).

이 주관적 행복연구는 크게 세 가지 인증마크를 지니고 있다. 첫째, 주관적이다. 이 행복은 개인의 경험 안에 위치한다. 주지하다시피 주관적 행복의 정의에는 건강, 안락함, 덕, 또는 부와 같은 필수적인 객관적 조건들이 들어 있지 않다. 이런 조건들은 행복에 잠재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내재적 필수적 요소들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둘째, 주관적 행복은 긍정적인 척도들을 포함한다. 셋째, 주관적 행복 척도들은 전형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평가를 포함한다(Diener 2009a, 13). 또한 주관적 행복은 자신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외에 만족에 대한 판단과 기분 및 감정에 대한 정서

¹⁶⁾ Wilson, Warner R. 1967. “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 *Psychological Bulletin* 67 (4): 294-306.

적 판단도 담고 있다(Kesebir and Diener 2009, 61).

이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유동적이다. 세계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를 분석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는 1995년 그의 저서를 통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입증했다. 여기서 경제적 안정이나 육체적 안전과 같은 생존적 욕구가 지배적인 물질적 가치관에서 자유, 자기표현, 삶의 질 등을 중시하는 탈물질적 가치관으로 점진 이동하고 있음을 포착한 그는 이듬해 물질적 풍요와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따른 주관적 행복의 변화를 추적했다. 그 결과 사회가 생존 수준에서 중간단계로 경제가 발전하는 동안에는 개인의 주관적 행복도 커지지만, 그 이후에는 경제가 더 성장하더라도 행복에 미미한 영향만을 미치거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가계수입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도 흥미롭다. 일반인들이 갖는 직관의 정확도를 조사하기 위해 수입 정도가 상이한 일반인들에게 우선 수입에 따른 자신의 행복을 말하고, 타인들의 행복도 예측해 볼 것을 주문했다. 그 결과 일반인들은 고소득층의 행복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했지만 저소득층에서 수입이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과대평가했다. 낮은 가계수입은 매우 낮은 삶의 만족도와 쌍을 이룰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돈을 좇는 사람들의 뚜렷한 충동과 돈과 행복 사이의 그리 크지 않은 실제 관계 양자 간의 격차를 조명해준다.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중간 이하의 가계소득은 행복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성인들의 그릇된 믿음이다. 이 잘못된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

17) 이 연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가 늘어나거나 더 균일해지면 인간의 행복도 증대될 것이라는 가정에 대한 시토브스키(Tibor Scitovsky)의 의구심을 대신 풀어주었다. Inglehart, Ronald. 1996. “The diminishing utility of economic growth: From maximizing security toward maximizing subjective well-being”. *Critical Review*, 10-4: 512~521.

를 늘일 기회를 좇게 하고 자유시간을 늘이는 대신 수입을 줄이는 것을 포기하게 한다.”(Aknin, Norton, Dunn 2009, 526)

물질과 행복, “수입과 행복의 관계가 단지 동시 발생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은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Cacioppo, Hawkey, Kalil, Hughes, Waite, Thisted 2008, 211). 다양한 계층과 인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카고 건강, 노화 및 사회적 관계 연구’¹⁸⁾에서 다중회귀분석과 종단면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관계만족과 주관적 행복은 상호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이는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행복은 가계수입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비가시적 이음줄들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이음줄들에 기여한다. 관계만족과 행복 사이의 선순환고리는, 이것이 가져다주는 문제해결, 자기효능 동기, 의사결정, 건강 등의 이로움과 더불어 동화 생리학의 심리학적 등가물을 이루는 기본 구성요소로서 기능할 것이다.”(Cacioppo et al. 2008, 216) 안녕, 행복, 건강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를 사회적 맥락에서 평가해 온 세계 가치관 조사, 유럽 가치관 연구(European Values Study), 미국의 사회적 자본 벤치마크 조사(Social Capital Benchmark Survey)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가족과 이웃의 결속력, 종교적 공동체적 유대 등으로 측정된 사회적 자본이 신체적 건강과 주관적 행복에 모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Helliwell and Putnam 2004).

복지와 분배의 균등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는 적잖이 엇갈린다. 행복의 수준은 복지국가에서, 그리고 복지의 분배가 고를수록 안녕의 수준도 높을 것이라 믿어왔다. 1980년부터 1990년까지 41개 국가를 대상으로 삼아 사회보장으로 국가 복지규모를, 건강과 행복

¹⁸⁾ The Chicago Health, Aging, and Social Relations Study (CHASRS).

한 삶의 영위 정도로 시민의 행복을 측정한 한 연구는 복지국가의 규모와 행복 수준 간에 연관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회보장예산이 넉넉한 나라의 국민들이, 마찬가지로 풍요롭긴 하지만 사회보장에 더 인색한 나라의 국민들보다 더 건강하거나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Veenhoven 2000). 사회보장지출의 증감이 건강이나 행복 수준의 등락과 무관하고, 건강과 행복에 있어서 시민들 간의 격차 완하나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 주장에 맞서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의 주관적 안녕에 관한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시계열자료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또는 문화적 조건들의 연결망이 늘어날수록 시민들은 삶을 더 만족스럽게 여기며, 따라서 여전히 “복지국가는 인간 행복의 동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Pacek and Radcliff 2008, 273).¹⁹⁾

주관적 행복에 관한 이상의 최근 연구결과들은 공히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욕구들이 충족되고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이 구비되면 물질의 행복 기여도가 줄어드는 대신 사회적 욕구가 행복을 견인하게 되며, 외적 재화는 쉽게 적응하여 ‘쾌락의 쳇바퀴효과’에 빠지는 대신 화폐로 교환할 수 없는 화목한 가족, 좋은 친구 등의 인간관계, 공동체에 참여하여 얻는 보람 같은 내적 재화들은 행복감을 오래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에 본질적이라는 것을 적시한다(허청라 외 2014; 우창빈 2013, 292).

19) 복지예산 규모와 국민행복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다수 진행되었다 (최영출 2014; 서문기 2015; 이내찬 2012).

3. 행복의 객관성

1) 행복 인지와 내감의 역할

행복연구는 행복에 대한 개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을 택했다. 이 방식은 정언적, 인과적, 교훈적이었던 고래의 형이상학적 행복론을 물리치고 현대과학의 도움을 받아 계량화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과 행복감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려는 시도로서, ‘연결적인(connective)’ 설명을 삼가고 ‘연관적인(conjunctive)’ 이해를 추구하므로 경험주의에 기반을 둔 겸손한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방법론은 가치중립의 관점에서 행복의 요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상대화하고, 타인의 행복을 인지할 수 없는 ‘주관적인’ 영역에 가둬놓을 뿐만 아니라, 실증에 경도된 나머지 행복을 인지하는 감정 작용원리와 인간의 만들새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무관심하다. 그러나 감정으로서의 행복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복학은 ‘행복한 느낌(감정)’과 ‘행복하게 느낌(인지)’에 관한 학문으로 정서적 반응과 인지적 판단을 주요 관심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느낌’이 한편으로 감정이나 심정을 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적 감각이나 감정을 ‘느끼는’ 인지를 뜻하기 때문이다. 어떤 조건하에서 행복감이 드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행복을 느끼는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행복을 느끼는 감각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행/불행을 느낄 수 있는가? 아니면 밝고 어둠을 구별하는 시각처럼, 달고 쓴을 구별하는 미각처럼 행/불행을 구별하는 별도의 감각을 지니고 있는가? 이견 없이 답변할 수 있는 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의 오감은 행복을 인지하기는커녕 이 감각기관들이 작동하고 있

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오감과 더불어 외감(外感)을 구성하는 근감각(筋感覺)과 내장감각도 마찬가지다.²⁰⁾ 행복감이라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최소한 외감의 기능을 인지하고 외감이 지각한 것들을 종합해서 구성하는 또 다른 감각이 있어야만 한다. 감정과 공감 이론을 집대성한 황태연은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의 ‘interiorem sensum’ 개념을 차용해 이 감각을 ‘내감’이라 규정한다.²¹⁾ 이 내적 감성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며, 긴 시간동안 삶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쾌/통을 판단함으로써 비로소 행/불행의 감정도 갖게 되는 것이다.

뇌과학과 신경과학의 20세기 후반이후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철학적 사유물이었던 내감을 현대과학의 신경체계로 재구성하는 데 성공한 황태연은 내감에서 ‘인식기능’과 ‘이해기능’으로 대별되는 12가지의 주요 기능을 찾아낸다.²²⁾ 내감의 6가지 인식 관련 기능 중 첫 번째는 외감 기능을 지각하는 것이다. 내감은 오감을 비롯해 외감을 통해 받아들인 것을 지각하고 이 감각들 자체도 지각한다. 예컨대 눈을 통해 입력된 시각자료를 지각하는 것도 내감이며, 눈이 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도 내감이다. 두 번째 인식기능은 외감의 지각자료들을 종합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오감을 통해 하얗고, 짙고, 냄새가 없고, 단단하고, 으깨면 바스락 소리를 내는 무엇이 있을 때 개별 느낌들만으로는 그 대상을 인지할 수 없고 이 느낌들이 합해

20) 오감, 근감각, 내장감각을 합쳐 외감이라 한다. 이 외감에 내감이 더해져 감각을 이루며, 여기에 감정이 합쳐져 감성을 구성한다(황태연 2015, 950).

21) 아리스토텔레스의 ‘koinē aisthēsis(공통감각)’, 새프츠베리와 허치슨의 ‘sensus communis’, 흄의 ‘internal taste or feeling’, 칸트의 ‘Gemeinsinn’ 등 내감과 관련된 서양철학 전반의 논의 및 이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는 황태연(2015, 951-1000)의 글을 참조할 것.

22) 황태연은 내감을 우반구의 전운동피질 영역들(전두엽, 두정엽과 같은 다양한 피질영역에 위치한 거울뉴런체계), 전전두피질의 여러 영역, 그리고 변연계와 시상하부 및 관련 영역들(변연계와 제2체성감각, 측좌핵, 해마 등이 상호작용하는 회로들의 기능 메커니즘으로 파악한다(황태연 2015, 1041).

져 통일성을 가져야만 비로소 소금으로 인지할 수 있다. 셋째는 지성에게 외감의 지각자료들을 전달하는 기능이다. 지성이 사유작용을 할 수 있으려면 외감을 통해 들어온 심상(인상)들을 전달받아야 하는데 내감이 이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비교 기능이다. 이 기능은 “한눈에 물건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 넓고 좁음을 직관하는 능력”으로 본능적으로 작동하며, 불공정이나 사회적 불평등의 지각도 그 뿌리는 내감의 비교 기능이다(황태연 2015, 1003). 다섯째는 방향, 위치, 지리를 판단하는 기능이고, 마지막 여섯째 인식기능은 기억과 습관화이다. ‘상상’은 대표적인 관념의 하나로 사유작용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기억’은 “감성적 인상의 잔존물, 즉 잔상(殘像)”으로 사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감성체계인 내감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황태연 2015, 1009). ‘체득’을 뜻하는 습관은 반복적인 기억으로부터 생겨나는데, 뇌가 습관을 관장할지언정 사유작용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이 또한 내감의 기능으로 파악한다(황태연 2015, 1010).

황태연에 따르면, 내감은 또한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삶을 영위하고, 인간이 자아와 타아의 감정과 의도를 알기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6가지의 이해기능을 수행한다. 그 첫 번째는 교감 및 공감기능이다. “여러 뇌 부위와 뇌세포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능력체계 또는 메커니즘”인 내감은 입력된 시청각 자료들을 전운동피질의 거울뉴런들을 발화시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이 자료들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인지하는데, 이 시뮬레이션 자체가 교감작용이다. 교감된 감정내용이 변연계까지 발화시켜 동일하거나 유사한 감정을 재생하면 ‘공감’에 이르게 된다(황태연 2015, 1010-11). 내감의 두 번째 이해기능은 감정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내감은 감정심상들(가령 기쁨, 성냄, 슬픔, 두려움 등의 심상)의 일어남과 가라앉음을 지각하고, 현재의 이 슬픔과 즐거움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것을 지각함으로써 그 의미들(가령 기

쁨, 성냄, 슬픔, 두려움)을 변별하여 이해하고, 이 감정 의미들의 차이를 식별하고, 그 심상을 영혼의 해마를 통해 장기 기억시킨다.”(황태연 2015, 1012)

다음에 이어질 내감의 네 가지 이해기능은 ‘판단력’에 관한 것으로, 이 내부 감각들이 작용하여 ‘평가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행복감이 드는 데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이해기능에서는 내감이 “쾌통감각(sense of pleasure and pain)”으로 기능하여 감각과 감정의 쾌락적(hedonistic) 의미를 이해하고, 이해 결과에 따라 기분 좋거나 기분 나쁜, 또는 ‘가(agreeableness)/불가(disagreeableness)’의 감정을 유발시킨다.²³⁾ 내감이 “외감의 모든 감각들과 심층의 모든 감정들을 일일이 체크하여 그 강약, 대소, 장단의 양적 적절성과 부적절성(지나침과 모자람)을 쾌·통감의 감흥적 변별심상(쾌락과 고통, 윤패·상쾌와 불쾌, 편안함과 꺼림칙함·불편함, 흐뭇함과 거리낌, 후련함과 짜증, 시원함과 찜찜함 등)으로 해석·판단하는 평가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쾌통변별은 “인간의 생존과 번영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존재론적 판단기능”이다(황태연 2015, 1013). 모자라면 안달하게 하고 지나치면 넉넉하게 해주는 내감이 없다면 인간은 적절한 환경을 찾을 수도, 욕망과 욕망충족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도 없을 것이다.

넷째, 내감은 유희행위의 재미 유무를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재미감각”으로 기능한다. 유희행위는 “물적 쾌락이나 이득의 추구 또는 미추선악추구로부터 자유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 생명력과 심신능력의 표현을 즐기는 행위”인데, 내감은 이 “유희행위의 질적 중화(균형과 조화)와 양적 중도를 직관적으로 변별하고 판단한다”는 것이다(황태연 2015, 1023). 놀이와 관련된 감각과 감정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²³⁾ 내감의 쾌·통감은 육체적인 쾌각이나 통각과 다르며, 희열(기쁨)이나 비애(슬픔) 같은 단순감정과는 다르다(황태연 2015, 1017).

도 존재하며, 기죽거나 화나거나 놀라거나 슬플 때, 또는 아프거나 병들거나 허기지거나 기운이 없을 때, 주변 환경이 열악할 때, 또는 집단 구성원들이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을 때는 놀지 않기 때문에 유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쾌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쾌적한 상태에 있기 위해서, 그래서 안녕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도 유희행위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내감은 본능적인 미추감각(sense of beauty and deformity)으로서 “외감을 통해 내감에 인상으로 전해지는 ‘유형적’ 대상의 속성적 요소들의 ‘객관적 구성(objective composition)’의 균형·조화 여부”를 판단해 아름답다/추하다, 예쁘다/밉다, 멋있다/멋없다, 구성지다/시끄럽다, 어울린다/안 어울린다, 맛있다/맛없다, 향기롭다/악취다 등의 미추심상으로 변별하고 그 미적 의미를 이해한다(황태연 2015, 1024-25). 이 미추감각, 더 짧게 말해 미감(taste)은 인간의 생존과 번영에 절대적인 기여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양질, 형태, 비례의 구성과 함께 작품과 작가의 미적 의도, 사회적 문제의식, 윤리도덕적 의미 등을 평가함으로써 예술작품의 미적 판단도 가능하게 해 준다.

여섯째, 도덕감각 또는 시비판단 기능으로서, 내감은 도덕감정들²⁴⁾을 실천하려는 행위의도의 ‘무형적’ 구성의 중화(中和) 여부를 선악으로 변별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감각은 맹자의 ‘시비지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우지 않아도 알고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일종의 감각으로서의 도덕적 지식능력, 즉 양지(良知)”를 뜻하며, 오감의 지각이 아닌 한에서 내감의 지각일 수밖에 없다(황태연 2015, 1030). 이 감각을 통해 인간은 다양한 사회적 행위, 시도, 제스처, 눈치, 언어로 표현된 타인의 도덕감정을 도덕과 무관한 여타 감정들과 구별하여 이해하

²⁴⁾ 도덕감정에는 사랑, 측은지심, 수오지심, 공경지심, 사양지심, 근친상간금지기가 있다 (황태연 2015, 1029, 1030-35).

고, 이 도덕감정이 실질과 내용면에서 중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훌륭하다, 선하다, 착하다, 가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시비감각은 타인의 평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자기 행위와 행위의도의 중화도 즉각적으로 저울질하여 떳떳함이나 뿌듯함, 수치심이나 자괴감이 들게 한다. 공맹이 주창했고, 다윈이 입증했으며, 사회생물학, 진화생물학, 동물행태학, 뇌과학, 철학, 정치학 등 수많은 분과학문의 학자들이 대변하고 있듯 이 도덕감각은 인간의 본능이다.

내감의 6가지 인식기능은 사물의 속성을 알기위해 만들어진 기능이며, 6가지 이해기능은 감정을 시뮬레이션하는 교감과 감정을 재생하는 공감기능, 감정의 발흥과 소멸을 감지하는 기능, 그리고 쾌락과 고통, 유희의 중화와 중도, '유형적' 대상의 객관적 구성에 관한 중화, '무형적' 행위의도의 구성의 중화를 변별하는 네 가지 판단기능으로 요약된다. 이중 인식기능 6가지와 이해기능의 교감/공감 기능, 감정 지각 기능 두 가지는 사물의 속성과 인간의 감정을 알아 쾌통감각, 재미감각, 미추감각, 도덕감각이 올바르게 작동하게 해 준다. 내감이 인간에게 본유(本有)적인 까닭은 쾌락, 재미, 아름다움, 도덕감정이 인간의 '생존'과 '정체성'에 본질적이기 때문이며, 이 네 가지가 항시적으로는 아닐지언정 항구적으로 충족되어야 인간은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2) 평가감정으로서의 행복

행복연구자들은 행복을 유일한 가치로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자인하며 다른 가치들을 통합하는 역할로 제한을 둔다. 행복정책 역시 행복을 유일한 목표로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우창빈 2013, 299). 이러한 조심스러움은 행복을 쾌락 또는 이익과 동치시키는 공리주의적 행복관에 기인하며, 행복연구자들 스스로 이런 행복관

의 위험성을 깨닫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공리주의적 행복개념이 아니라 인간정체성의 추구 및 보존의 관점에서 행복을 바라본다면, 다시 말해 상술한 내감의 쾌통감각, 재미감각, 미추감각, 도덕감각의 판단 충족을 행복으로 바라본다면 행복을 행복정책의, 나아가 삶의 “유일한 가치”로 삼아도 무방할 것이다.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행복은 ‘고통’에 비유된다. 모든 사람들은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서 뜨거운 난로를 건드리면 고통을 경험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외감과 내감에 결합이 없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취하는 태도이다. 이에 반해 상대주의적 관점에서는 행복이 ‘미’에 비유되는데, 미는 시간과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견해이다. 피카소의 그림들을 모든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지도 않거니와 모든 사람들이 미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Veenhoven 2010, 328). 그러나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미감(taste)의 상대성은 상대주의자들이 편취할 만큼 그렇게 상대적이지 않다. 인간본성 연구에 한 획을 그은 흄(David Hume)의 표현을 빌어보자.

“내적인 짜임의 본래 구조로부터 어떤 특정한 형태들이나 성질들은 유쾌하도록, 다른 것들은 불쾌하도록 계산되어 있다. 이것들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이는 신체기관의 명백한 결합이나 불안전성 때문이다. 열이 있는 사람은 그의 입맛이 풍미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고집하지 않을 것이며, 황달에 걸린 사람은 색과 관련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나서지 않을 것이다. 각각의 인생(creature)에게는 온전한 상태와 부족한 상태가 있으며 전자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미감과 감정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Hume 1987, 233 - 234)

외감과 내감을 공히 지니고 태어난 우리의 유사한 만듦새가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듯 이 유사한 만듦새는 우리

로 하여금 동일한 처지에서 동일한, 최소한 비슷한 행복을 느끼게 한다. 또한 비판적 판단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풍토가 주어졌을 때 좋은 미적 판단이 가능하듯 행복 역시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시비(是非)와 가부(可否), 호오(好惡)를 가릴 수 있을 때 더 온전하게 느낄 수 있으며, 다만 사람마다 타고난 미감의 섬세함이 다르듯 행복을 느끼는 감도가 다를 뿐이다. 미감의 개발을 위해서는 뛰어난 미적 판단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미감을 좇아야 하듯 행복을 적절히 느끼는 것도 수신(修身)을 통해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다.

행복 인지의 보편성을 규명한 실증적 연구도 있다. 행복학 연구의 선구자이자 권위자인 벤호벤(Ruut Veenhoven)은 “행복은 얼마나 보편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 광범위한 물음을 7개의 하위 질문으로 나눈 뒤 ‘세계 행복 데이터베이스(World Database of Happiness)’와 ‘갤럽 세계 여론조사(Gallup World Poll)’ 등의 경험 자료를 활용하여 답한다.²⁵⁾ 그의 결론에 따르면 우리의 행복은 보편적이며, 나라 간에 삶의 평가가 다르더라도 이는 평가방식이 달라서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Veenhoven 2010).²⁶⁾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행복이 그 자체로 ‘자명한 선’인 까닭은 인간의 만들새와 정체성 때문이다. 인간은 물질적 풍요와 적절한 환경, 건강 등을 통해 쾌감을 충족하고, 나아가 내감의 또 다른 판단력들에 힘입어 재미, 아름다움, 옴을 및 사랑의 연대감까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행복의 보편성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만들새는 어떠하며,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

25) 하위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얼마나 삶을 애호하는지 평가하는가, 우리는 같은 근거에서 삶을 평가하는가, 행복의 조건은 모든 인간에게 비슷한가, 행복의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가,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는가, 우리는 비슷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가, 모든 문화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행복한가?

26) “행복한” 국가들을 방문한 한 여행기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Weiner 2008).

는 문장이 있다.

“즐거움은 욕망충족의 기쁨도 아니고, 촉감적·말초신경적 쾌각(快覺)도 아니다. 기쁨은 단순감정이고, 쾌각은 촉각과 내장·근육의 감각이다. 반면, 즐거움은 내감적 변별(쾌통·재미·미추·시비판단)감각을 통해 유발되는 쾌락적, 유희적, 미학적 평가감정(기분 좋음, 재미 있음, 아름다움)과 도덕적 평가감정(훌륭함, 떳떳함, 뿌듯함)에 대한 공감과 자기공감이다. 따라서 즐거움 또는 행복은 공감적 평가감정들이다. 즐거움의 반대는 괴로움, 즉 불행(misery)이다. 평가감정들이 (자기)공감된 감정으로서의 즐거움(행복)은 자아가 타아의 긍정적 평가감정을 즐거워하는 것을 다시 타아가 즐거워하는 경로의 공감적 상호반향을 일으키기 때문에 단순한 긍정적 평가감정들과 달리 아주 지속적이다.

물론 공감적 평가감정들이 즐거움(행복)의 유일한 원천인 것은 아니다. 사랑, 즉 ‘심신적 자타분리 속에서의 공감적 일체감’도 즐거움(행복)의 또 다른 중요한 원천이다. 사랑, 또는 사회적 유대는 상술했듯이 모든 포유동물, 특히 사회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에게 존재론적이다.”²⁷⁾ (황태연 2015, 628 - 629)

행복이 그 자체로 자명한 선이라면, 그리고 “이기심의 합리성”에 따라 우리 자신의 행복을 끊임없이 증진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타인의 행복이나 이익까지 신경 써야 하는가? 이 질문의 오류는 두 번째 가정, 행복을 쾌락과 등치시키는 공리주의적 행복관에 있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더라도 중도를 넘어서는 것을 꺼리며, 쾌통판단이 시비판단과 충돌하면 대개 후자를 따르기 마련이다. 라즈(Raz)는 사람은 자신의 안녕을 키우거나 보호하려는 의도를 갖고 무언가를 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타인들이 없다면 번성할 수 없으며 이기적인 행

²⁷⁾ 황태연은 여기서 ‘즐거움’을 행복과 등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탤릭체(필자 강조) 표현들은 ‘행복’으로 바꿔 읽어도 무방하다.

복 추구에 제한을 둔다. “동료애와 우정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미덕들이며, 뿐만 아니라 여타 모든 것들, 직장생활, 여가활동, 문화적인 관심사, 휴식도 현존하는 사회적 현실을 배경으로 끊임없이 유동적인 상태에서 사람들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한 결과물이다.”(Raz 1995, 10) 그렇다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을 듯하다. “어린이들은 본래 사회성이 있으며, 가족 내에서 사회성을 관대함으로 확장하는 것을 배운다”는 윌슨(Wilson)의 견해는 우리를 안도하게 한다. 어린이들의 선천적인 사회성은 그들로 하여금 타인들의 분위기와 행위에 민감하게 만든다. 처음에 어린이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타인들의 분위기와 행위들을 통제하려 들지만, 나중에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타인들을 기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타인들의 느낌에 기초한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어린이들의 탁월한 공감능력이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타인의 감정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능력은 타인의 행복(well-being)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간다. 어린이들은 별 가르침 없이도 그들 자신의 행복이 어떤 식으로든 타인들의 행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배운다. 조금만 가르쳐주면 어린이들은 그들 자신의 행복을 약간 희생함으로써 타인들의 행복이 증대될 수 있음을 배운다.”(Wilson 1997, 46)

내감의 네 가지 감각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 행복을 위한 조건이 하나 더 있다. 내감의 판단을 통해 만들어진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타인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기분 좋고 나쁨을, 재미있고 없음을, 아름답고 추함을, 옳고 그름을 내감이 직관적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된 관계로 인해 이 감정을 표현할 대상이 없거나, 대상들이 있음에도 생존 불안이나 제한적인 사회규범 및 제도 등의 요인에 가로막혀 감정을 표출할 수 없다면 행복감은 반감되고 말 것이다. 가치설

문조사의 경험자료들 역시 자기표현의 기회를 갖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와 연관이 있음을 증명해 준다(Inglehart and Welzel 2005, 139).

4. 결론

이 글은 정부의 “행복”과 시민의 “안녕”이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부딪히는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한국의 행복 지수, 이 지수 평가의 근거가 된 행복연구의 핵심 주제들과 주관적 행복 개념을 살펴보고, 이어 행복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철학적 논의로 전환해 인간의 만듦새와 행복을 느끼는 조건의 보편성에 관해 논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물질적 풍요와 적절한 환경, 건강 등을 통해 내감이 판단하는 쾌감이 충족되고, 여기에 내감의 또 다른 판단 대상인 재미, 아름다움, 유희 및 사랑의 연대감까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 안녕, 웰빙 상태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이 결론을 준거로 “국민행복”과 “안녕들 하십니까”를 비교해보면 경제발전, 이익, 복지 등으로 표현된 전자는 내감의 쾌통감각 충족을 강조한 반면 정의, 공분, 연대 등으로 표현된 후자는 내감의 시비감각에 훨씬 더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두의 문제에 대한 답은 ‘정부는 쾌락과 효용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행복관에 입각해 있었고, 시민사회는 물질과 이익을 잃더라도 사람을 얻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연대적 도덕감각적 행복관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이 될 것이다.

‘복지국가에서 ‘행복국가’로의 변화가 시작된 지금 행복에 대한 연구는 감정 및 공감 연구와 더불어 인간학의 가장 중요한 관심 영역이 되었다. 그리고 행복정책의 방향도 이미 현실정치를 통해 제시되었다. 행복지수에서 늘 상위를 점해온 스웨덴을 이끌어온 스웨덴 사민당은 일

찍이 1975년 행복과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계급)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처지에 대한 공감(empathy)과 서로에게 동정심을 보이려는 기꺼움”이라고 선언하고, 이 관점에서 국민통합과 행복정책을 추진해왔다 (Stjernø 2005, 124; Palme 1972). ‘선진(행복)국’이 시행한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한 검토와 비교, 그리고 행복 논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공감정치에 대한 연구는 바로 뒤따라야 할 차기 과제가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행복은 서로에 대한 희생과 배려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타인의 행복에 대한 관심은 인간에 본유한 도덕성의 발로다. 회자되듯 인간은 과연 ‘빈 서판’(tabula rasa)으로 태어날까? 아무래도 회의적이다. 아니, 우리는 빈 서판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나면서부터 ‘아는’ 자는 없으므로 본유관념(innate idea) 또는 본유지식은 없다는 의미에서 일면은 타당하지만, 나면서부터 ‘느끼지’않는 자 또한 없는 까닭에 맛, 색깔과 형태, 냄새, 소리, 촉감의 심상들을 구별하는 본유인상(innate impression)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다. 이 본유인상에는 내감이 불러일으키는 도덕적 심상들도 포함된다. 이런 본유인상이 있기에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선의 색채를 입고 입히는 것이다. 사랑으로 아이와 첫 눈맞춤을 나누지 않은 부모는 어디에도 없으며, 자녀에게 선을 가르치지 않은 부모들은 어느 시대에도 없었다. 선에 대한 선천적 인상이 없다면 선을 가르치려는 부모의 본성도 없을 것이며, 설령 있다한들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다.

(접수 2016. 10. 3. 심사완료 11. 4. 게재확정 11. 15.)

참고문헌

- 김성동. 2007. “인간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접근.” 『대동철학』 41(1). 51 - 77.
- 김승권·장영식·조홍식·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연구 2008-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여라. 2015. “한국의 언론 자유도 현황과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19. 국회입법조사처.
- 마크로밀엠브레인. 2015. “이민 관련 인식 조사.” 『리서치보고서』 2015(1). 290 - 321.
- 새누리당. 2012. “국민행복의 청사진! 『국민행복추진위원회』가 만들겠습니다.” 보도자료. 새누리당.
- 서문기. 2015. “잘 사는 국가는 행복한가?” 『한국사회학』 49(1). 111 - 137.
- 서은국. 2014. 『행복의 기원: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파주: 21세기북스.
- 안희순. 2010. “공자의 행복관 : 『論語』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41(12). 303 - 332.
- 우성대. 2014. “행복의 정치경제학을 위한 연구: 웰빙과 삶의 질, 그리고 행복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통권73. 291 - 316.
- 우창빈. 2013.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정정책의 이론, 논란, 가능성과 조건들.” 『행정논총』 51(2). 283 - 318.
- 이내찬. 2012.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2). 5 - 40.
- 조현정. 2015.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보고서 2014-2015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최영출. 2014. “사회정책적 요인이 국민행복도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OECD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8(1). 1 - 22.
- 통계청. 2015.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통계청.
- 한국갤럽. 2015. “데일리 오피니언.” 167.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허청라·구재선·서은국. 2014. “기본적 욕구 충족 이후의 행복: 사회적 욕구의 중

- 요성.”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8(2). 59 - 78.
- 황태연. 2007. “중도개혁주의의 정치철학과 정책방향.” 중도개혁주의,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연구논총』 통권1호. 11 - 65.
- — —. 2015.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 1』. 파주: 청계.
- Abbinnett, Ross. 2013. *Politics of Happiness: Connecting the Philosophical Ideas of Hegel, Nietzsche and Derrida to the Political Ideologies of Happiness*.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 Aknin, Lara B., Michael I. Norton, and Elizabeth W. Dunn. 2009. “From Wealth to Well-Being? Money Matters, but Less than People Think.”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 (6). 523 - 527.
- Aristotle. 2009. *The Nicomachean Ethics*. Lesley Brown (eds.) & David Ross (tr.). Revised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ok, Derek. 2010. *The Politics of Happiness: What Government Can Learn from the New Research on Well-Be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acioppo, John T., Louise C. Hawkey, Ariel Kalil, M. E. Hughes, Linda Waite, and Ronald R. Thisted. 2008. “Happiness and the Invisible Threads of Social Connection: The Chicago Health, Aging, and Social Relations Study.” in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Michael Eid and Randy J. Larsen (eds.), 195 - 219. New York: Guilford Press.
- Diener, Ed. 2009a. “Subjective Well-Being.” in *The Science of Well-Being: The Collected Works of Ed Diener*, 11 - 58. Social Indicators Research Series 37. Dordrecht: Springer. Previously published in 1984. *Psychological Bulletin* 95 (3).
- — —. 2009b. *The Science of Well-Being: The Collected Works of Ed Diener*. Social Indicators Research Series 37. Dordrecht: Springer.
- Diener, Ed, and Richard E. Lucas.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 276 - 302.
- Easterlin, Richard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 Empirical Evidence.” in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Paul A. David and Melvin W. Reder (eds.), 89 - 125. New York: Academic Press.
- Gallup-Healthways. 2014. “State of Global Well-Being.” Gallup-Healthways Well-Being Index.
- — —. 2015. “State of Global Well-Being: 2014 Country Well-Being Rankings.” Gallup-Healthways Well-Being Index.
- Haybron, Daniel M. 2008. “Philosophy and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in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Michael Eid and Randy J. Larsen (eds.), 17 - 43. New York: Guilford Press.
- Helliwell, John F., and Robert D. Putnam.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59 (1449). 1435 - 1446.
- Hume, David. 1987. *Essays Moral, Political, Literary*. Indianapolis: Liberty Fund. edited and with a Foreword, Notes, and Glossary by Eugene F. Miller, with an appendix of variant readings from the 1889 edition by T.H. Green and T.H. Grose, revised edition. [1777].
- Inglehart, Ronald, and Christian Welzel. 2005.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hneman, Daniel. 2011. *Thinking, Fast and Slow*. Macmillan.
- Kahneman, Daniel, Peter P. Wakker, and Rakesh Sarin. 1997. “Back to Bentham? Explorations of Experienced Utili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 (2). 375 - 406.
- Kesebir, Pelin, and Ed Diener. 2009. “In Pursuit of Happiness: Empirical Answers to Philosophical Questions.” in *The Science of Well-Being: The Collected Works of Ed Diener*, 59 - 74. Social Indicators Research Series 37. Dordrecht: Springer. Previously published in 2008.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 (2).

- Layard, Richard. 2005.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New York: Penguin Press.
- McMahon, Darrin M. 2006. *Happiness: A History*.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 Pacek, Alexander, and Benjamin Radcliff. 2008. "Assessing the Welfare State: The Politics of Happiness." *Perspectives on Politics* 6 (2). 267 - 277.
- Palme, Olof. 1972. "Democratic Socialism Means Solidarity." Borås: Socialdemokraterna.
- Sen, Amartya. 2000.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Alfred A. Knopf.
-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and Jean-Paul Fitoussi. 2010.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Paris: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 Stjernø, Steinar. 2005. *Solidarity in Europe: The History of an Ide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enhoven, Ruut. 2000. "Well being in the Welfare State: Level Not Higher, Distribution Not More Equitable."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earch and Practice* 2 (1). 91 - 125.
- . 2010. "How Universal Is Happiness?" in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ell-Being*, Ed Diener, Daniel Kahneman, and John F. Helliwell (eds.), 328 - 35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EF. 2014.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 - 2015." World Economic Forum.
- Weiner, Eric. 2008. *The Geography of Bliss*. New York: Twelve.
- Wilson, James Q. 1997. *The Moral Sens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3].

Objective conditions of the subjective well-being
: A Critical Review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s
Happiness Policy and the Happiness Research

Seo Chang Hoon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discrepancy in “well-being” discourse between the Park Geun-hye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in Korea. To this end, we will look at Korea's happiness indices, the core themes of happiness research which are the basis of those indices evaluation, and the concept of subjective well-being (SWB), and then switch to philosophical discussion to deepen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the original structure of human-being.

During this process the following fact will be confirmed that true well-being is only possible when the inner sense judges pleasure by the material abundance, the proper environment, the health, etc. and in addition to that, when senses of beauty, play, and right/wrong are satisfied.

Resultingly it can be seen that the civil society is much more appealing to the feeling of right and wrong, whereas the government empathizes the feeling of pleasure and pain.

Keywords: well-being, happiness, happiness research, well-being state, subjective well-being (SWB), life satisfaction, inner sense, moral sense

